



US-CHINA WATCHING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US-China Policy Institute
亞洲大 美中政策研究所

2020. 12. 10 <제31호>

바이든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

김 흥 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정책 제언

‘결미연중 플러스’ 전략의 추진

바이든 시대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책은 “결미연중(結美聯中) 플러스”의 방략을 추진해야 함.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외교·안보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중강국’ 전략, 그리고 비전으로는 ‘강대국으로 약진하는 새로운 국가’ 상을 정립해야 함

- 한국은 이 혼돈의 시기에 기존의 전략자산인 미국과 동맹을 공고히 유지하고,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실제화하는 plus-sum game 추진해야 함.
- 우리는 미중 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감당할 역량이 아직 미비한 실정임. 미중 전략경쟁의 과정과 결과가 불확실한 가운데 이 책략의 핵심은 최대한 우리의 외교안보적·경제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시간을 버는 것임.

한미동맹은 기존의 군사동맹 위주에서 사이버, 기후변화, 질병은 물론이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는 데 같이 협력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해야 함.

- 다만, 조바심에 기인하여 미중 간에 선부른 선택을 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음. 미국이 현재 추진중인 한미동맹을 기존의 대북한동맹에서 점차 대중국 동맹으로의 전환은 한미동맹의 이익과 국익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거부되어야 함.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존중해야 함. 문재인 정부의 대중정책 기조는 “실질적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구현이었음

- 현재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에 미국이 대중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임. 미국으로부터 전략산업에 대한 탈동조화 압력을 더욱 강해질 것임. 이에 입각한 새로운 대중 정책의 수립이 필수불가결하고 세심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 중국은 현재 우리 무역의 거의 34% 정도를 차지하고 이에 대한 대체제는 없음
- IMF가 최근 발표한 바처럼 현 상태라면 2029년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추정함. 미래의 시장은 중국에 있으므로, 중국으로부터의 탈출 전략보다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함
- 중국은 향후 세계질서 형성에서도 중요한 행위자이며, 한반도 문제의 전략적 협력자로 구성해나가야 함

새로운 천하질서 수립을 위한 제3공간 외교와 국제연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함. 미국의 강력한 대중 압박 동참에 대해서는 조급한 선택이나 굴복보다는 서유럽의 강대국, 일본 등 다른 유사 환경 국가들의 선례에 맞춰나가는 전략을 권고함

- 중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군사동맹 참여 요구는 수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대신 우리 자체의 국방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안정과 평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방안 제시(Cf.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 압박에 대해서도)

“결미연중(結美聯中) 플러스”의 방략을 추진해야 함.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외교·안보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중강국’ 전략, 그리고 비전으로는 ‘강대국으로 약진하는 새로운 국가’ 상을 정립해야 함

미중 전략경쟁의 과정과 결과가 불확실한 가운데 이 책략의 핵심은 최대한 우리의 외교안보적·경제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시간을 버는 것임.

제 3의 공간 외교에서 아태지역 핵심 축은 한-호주관계임. 현재 대중 외교의 반면교사이기도 한 호주의 외교·안보 상황은 전반적으로는 한국과 대단히 유사함

- 제3의 공간 외교에서 아태지역 핵심 축은 한-호주관계임. 현재 대중 외교의 반면교사이기도 한 호주의 외교·안보 상황은 전반적으로는 한국과 대단히 유사함. 호주는 기존 세계 질서 유지의 한 축이었던 5 Eyes의 한 구성원으로 경험 공유.
- 그리고 한-독일 축을 전략 동맹으로 강화해야 함. 독일은 아틀란틱 동맹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이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는 서유럽 지역의 리더이며, 우리가 필요한 기술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음.
- 그 밖에도 캐나다, 영국,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국가 등을 제3연대의 네트워크에 포함시켜, 새로운 규범, 규칙, 국제기구, 레짐의 형성에 앞장서서 새로운 천하질서 수립을 추동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함.
- 동시에 한일 협력 관계는 반드시 복원할 방법을 찾아야 함. 한일관계의 복원은 우리에게 많은 전략적 자산을 안겨 줌. 위협에 대한 인식의 공유도가 서로 상응함

문제 제기

1. 미중 전략경쟁의 새로운 전개

바이든 시대 미·중은 서로 '미중 전략경쟁'의 본질이 '장기적'이고, '경쟁'이 위주가 되며, 천하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함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음

- '경쟁'의 범위가 단지 무역을 넘어 경제 전반, 군사·외교, 과학·기술, 인적 교류 및 이념과 체제의 영역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주의적 이념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연대의 구성, 다자주의와 제도적 접근법 등을 적극 활용하여 중국을 압박할 것임. 바이든의 방식은 외양을 부드럽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보다 곤혹스러울 수 있음.

트럼프 시대 이미 '신냉전' 혹은 '제2차 냉전'의 시기에 들어섰다는 국내외 평가는 나름의 근거를 지니고 있음. 바이든 시대에도 그 연속성이 존재하는 만큼 '구냉전'과의 차이점을 식별해내고, 그 대응책은 기존의 상식에 입각한 대응과 차별화해야 함

- 미·중은 각기 냉전적 심리상태를 가지고 첨예하게 상호 대립하고 있으나, '구냉전'과는 달리 각기 진영을 형성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임. 즉, 현 상황은 미·중 간의 냉전적 대립, 나머지 국가들(the rest of the world)은 각자도생을 추구하는 혼재한 상황임
- '구냉전'은 분리된 세계/체제 간의 대립이었다고 한다면, '미중 전략경쟁'은 오히려 동일 체제 내의 경쟁과 갈등에 가까움. 현재 패권 도전국인 중국이 오히려 체제 수호의 슬로건을 주창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음. 다만, 미·중 어느 누구도 세계 나머지 국가들의 신뢰를 충분히 획득하지는 못하고 진영화하는 데 실패하고 있음. 다만 그 파장은 아직 예측할 수 없으니 단초는 이미 형성되고 있음.
- 트럼프 시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해 중국은 '인도·페르시아만 전략'이라 칭할 정도로 미국의 서진(西進) 전략에 대응해 더 서쪽으로 전략 중점을 옮기고 있음.
- '경제 안보화'와 '탈동조화(decoupling)' 추세가 강력하게 동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들어 급격히 구축된 경제적 상호의존의 세계는 일거에 탈동조화할 수 없을 정도로 얽혀 있다는 현실의 벽에 직면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구호와 요청과는 달리 그 실현은 바이든 정부를 넘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그 실현 여부도 불투명함
- 경제 안보화와 탈동조화(decoupling) 추세는 미·중 양국 모두 강한 국내적 지지를 받고 있어 향후 유지될 것으로 보임. 미국은 세력 전이에 영향을 미치고 제4차 산업혁명에 긴요한 반도체, AI, Big Data, 로봇, (양자) 통신, (신)에너지, 신물질 등 영역에서는 중국에 대한 공급선을 억제/차단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전략적 산업과 기술의 영역에서 미국 플랫폼과 중국 플랫폼으로 배타적으로 나뉘어 질 가능성이 충분히 보임.
- 한국 정부는 최대한 기업에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기업들은 분야에 따라 미국 플랫폼, 중국 플랫폼을 선택하거나 회색지대를 최대한 활용할 준비를 해야 함.

Covid-19로 인해 미국은 상대적으로 더 타격을 받고 있어, 바이든 시기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주목됨. 전략경쟁은 장기적 미중 대결로 예상되나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어떻게 끌고갈지,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이 부재한 상황임. 이는 새로운 천하질서 수립까지 상당한 혼돈의 시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함

- 미국의 합중 전략, "중국 대 나머지 세계의 대립 구도" vs. 중국의 연횡전략, "다극화 전략"이 충돌

현 상황은 미·중 간의 냉전적 대립, 나머지 국가들(the rest of the world)은 각자도생을 추구하는 혼재한 상황임

트럼프 시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해 중국은 '인도·페르시아만 전략'이라 칭할 정도로 미국의 서진(西進) 전략에 대응해 더 서쪽으로 전략 중점을 옮기고 있음.

- 트럼프 시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경제적으로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구상, 외교안보적으로는 QUAD(미일호인)+(한국,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군사적으로는 태평양 구상(Pacific Initiative)으로 구성됨. 바이든 시대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 할 것이지만 집행 가능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
- 중국은 '중국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이를 위해 일대일로를 바탕으로 서진 전략의 강화 + 동북아 확보, 다자주의 추진. 군사적으로는 A2AD(Anti-Access, Area Denial) 역량 강화임
- 중국은 미국의 '탈동조화'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 내수의 선순환구조 확립을 중심으로 지역적인 가치사슬의 구성을 결합한 '경제 쌍순환' 전략 추진.
- '쌍순환' 전략의 핵심은 동아시아 지역과 어떻게 지역협력을 달성하느냐에 달려 있음. 한국과의 협력은 그중에서도 가장 필수적임. 중국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전략자산인 반도체 생산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임. 중국은 한국, 일본을 자국의 가치사슬내 포용할 수 있다면 미중 전략경쟁을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임

2. 한국의 외교안보에 대한 영향

미중 전략경쟁의 추이는 기존에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서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하고, 한미동맹을 통해 안보를 확보해 온 한국에 커다란 도전을 안기고 있음

- 핵심은 미국 중심의 천하질서가 해체되고 있으며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이 상수였으나, 점차 변수로 전환하고 있으며
- 미중 전략경쟁의 결과가 불확실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열려 있으며
- 이는 기존의 상식과 판단의 프레임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고, 수동적이거나 정적인 대응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할 개연성이 커짐. 기존 보수가 즐겨 활용한 '한미동맹'의 강화 같은 만능의 답에 의존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위험하다는 것임

미중 전략경쟁의 결과로 혹은 그에 영향을 받으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으면서 미 대선이후 향후 5년 이내에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외교·안보 도전은 다음과 같이 식별할 수 있음

-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와 대응 원칙의 정립 필요성. 부재시 극심한 남남 갈등과 주변 강대국의 게임판으로 전략.
- 북한의 핵무장과 비대칭 군사력의 우위에 입각한 '생존 위주 전략'에 대한 대응전략이 미비함
- 코로나 위기(극복) 이후 북한의 보다 대담한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의 교환 제안 가능성과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북한의 비대칭 군사력의 확보 성공은 주한미군 축소/철수는 물론이고 한미동맹 자체의 위기를 낳을 가능성 상존
- 미국 '태평양 억지 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의 추진과 한국 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 시도는 한중 관계를 파탄으로 이끌 가능성

핵심은 미국 중심의 천하질서가 해체되고 있으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이 상수였으나, 점차 변수로 전환하고 있음. 미중 전략경쟁의 결과가 불확실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열려 있음

3. 북한의 선택과 비핵화 문제

美-中 전략경쟁의 결과로 미중 어느 나라도 향후 북한 비핵화를 정책 우선순위로 놓고 추구하지 않을 것임

-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완전 비핵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임
- 북한의 현 정세에 대한 상황인식은 불안과 공포, 돌풍과 재앙으로 요동치는 혼란스러운 세계라는 것임 [2020년 6월 29일 노동신문]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대한 해법으로 다음 세 가지를 추진하고 있음

- ④ 최수의 게임에서 제안하듯,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북-러, 북-중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력갱생 전략을 추진
- 북한의 입장에서는 추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상황을 타개하려는 시도는 구조가 제약하는 비용이 너무 급격히 상승하여 당분간 어렵다는 판단
- 안보-안보 교환방식이나 안보-경제 교환방식 모두 작동하기 어려움. 북한 역시 미중전략경쟁의 장기성을 전제하고 대비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해야 함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대한 해법으로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력갱생 전략을 추진

북한의 핵무장은 재래식 군사역량에서 열세인 북한의 안보 불안을 반영함. 추후 이는 다시 현상변경의 무기로 쓸 수도 있어 한국의 안보 불안을 촉진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임

“대항적 공존 정책”을 제언함. 남북한의 속성이 ‘대항적’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공존’을 추구하는 판단이 전제되고 있음.

발행처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발행인 김홍규

편집인 서민혜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울곡관 527-2호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전화 031-219-3861

홈페이지 <http://ucpi.ajou.ac.kr>

US-China Watching은 미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여 최신 현안을 분석하는 자료입니다.

◎ 북한은 대한민국/주한 미군 군사역량에 대해 핵무기 보유와 비대칭 군사역량의 확보로 주도권 확보

- 북한이 다연장 발사관을 이용하여 다수의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초대형방사포(KN-25)를 개발하여, 저고도의 다양한 비행궤적을 통해 다종의 SRBM과 동시에 발사하면 현실적으로 한국과 주한미군이 어떠한 전략자산을 가져다놓아도 요격은 거의 불가능함. 이 차원에서 보자면, 북한은 이미 군사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 최근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당 75주년 열병식에서 화성 16호 ICBM과 SLBM을 과시한 것은 이러한 목표와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임

◎ 미중 전략경쟁에서 기본적인 생존을 보증하고, 미국의 압박에 대응할 견제 수단 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는 중요하다고 인식

- 북한은 최근 들어 부쩍 중국과의 전략적인 유대를 강조. 중국의 “한 참모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북한의 생존 전략의 일부
- 물론 중국은 북한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상황은 아님. 북한에 의한 연루상황을 중국은 우려. 중국은 북한 문제가 미중 전략경쟁의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중국의 국가전략은 UN을 중시하고 활용하고자 함. 북한에 대한 지원도 평양에 종합병원을 지어주는 것처럼 화생지대를 활용하여 지원- 이 역시 양제츠가 하와이에서 폼페이오와 회담시 양해를 구했다는 전언이 존재함. 중국은 대북 UN 제재 자체를 정면으로 훼손하지는 않을 것임. 한국이 UN 제재 이완을 주도하게 유도하고, 중국은 자연스레 동참하는 방안을 선호
- 중국이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북한 카드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은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자체보다는 한국이 반중 전선을 분명하게 하였을 때, 고려할 것임.

북한의 생존전략 중심의 방향설정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존하는 남북한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건설하기 희망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 및 기대와는 확연히 결이 다름

- 이 상황은 정책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라는 보다 구조적인 조건에 의해 제약받고 있음.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임.
- 무리한 대북 정책의 추진은 우리의 입지를 오히려 더욱 약화시킬 수 있음. 효과적인 요소를 고려하면 직선만이 목표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은 아님
- 북한은 한국의 역량과 의지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스스로 강국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어, 한국과 협력하여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갈 의지가 부재함
- 한국 정부 역시 새로운 변화를 담지하면서, 대북관계와 비핵화 문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금해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과제로 놓고 대응할 태세로 전환하여야 함. ‘통일부’를 보다 광의의 민족문제를 다루는 ‘민족사무부’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여야 함.

남북한 간 ‘신뢰부족’, ‘안보불안’의 심리가 만연한 상태에서 양측의 안보불안 동시 해소가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추진할 필수 조건임

- 북한의 대남/대외 불신은 코비드-19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한국과는 물론이고 대외 접촉이나 협력을 극도로 제약할 것임
- 북한의 핵무장은 재래식 군사역량에서 열세인 북한의 안보 불안을 반영함. 추후 이는 다시 현상변경의 무기로 쓸 수도 있어 한국의 안보 불안을 촉진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임
- 결국 양측의 안보불안은 계속되고,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비핵·평화 구상을 제시하고 선의를 보여도,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 줄 결단과 자신감을 증명하지 않으면, 북한은 결국 핵무장과 자체의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속성임. 2018-19년의 경험은 북한을 현재의 결론으로 이끌게 한 것으로 보임
- “대항적 공존 정책”을 제언함. 남북한의 속성이 ‘대항적’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공존’을 추구하지는 판단이 전제되고 있음.
- 군사적으로는 북한은 대놓고 자극하지 않으면서 “공포의 균형”을 달성하는 국방개혁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스스로 안보적인 불안을 해소하고, 군사적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인도적 지원 방침은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적극적인 대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음.